

## 이번 주 도내 648억 규모 시설공사 발주

이번 주 도내에서 648억원 규모의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강원지방조달청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시설공사는 국토교통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59호선 남면~정선2도로건설공사(총 공사예산 384억8,200만원)를 포함한 16건

648억1,679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설공사 내역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국도 7호선 노후교량개축공사(52억8,100만원)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국도 5호선 말고개터널 전기 시설보수공사(16억2,500만원) 등이다.  
하위윤기자 faw4939@

## 평창서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강원도 경제인들의 축제인 '2017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가 처음으로 19일부터 이틀동안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다.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최돈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해 강원도 경제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 강원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업무협약과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문순 도지사의 특강이 진행된다.

김도운



중앙정부는 추경에서 외면했지만...

# 지자체, SOC 투자로 일자리 확충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의 추경 편성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추경안에는 새 정부의 추경과 달리 크고 작은 SOC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건설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건설경제>가 광역자치단체별 올해 추경 편성 현황을 집계한 결과, 17개 시·도 중 11개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했거나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강원도, 경북도 등 일부는 이미 지난 3~4월 추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제주도와 부산시, 세종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춰 잇따라 추경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앞서 중앙정부의 추경(안)에 지방교부금으로만 총 3조50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

17개 시·도 중 11곳 편성  
대전·인천·부산·경남 등  
800억~1000억 예산 배정  
"SOC사업 고용창출 특효약"  
물량난 지역업체에 '희소식'

조달 부담도 한결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전남도 등 아직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6곳 중에서도 3~4곳은 조만간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조5000억원 교부금 중에는 지방교육재정 보조를 위한 1조8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주요 시·도 교육청 역시 추경을 편성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추경안을 보면, 중앙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자리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몇년간의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모양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소규모 생활형 SOC마저 추경에서 배제한 것과 달리, 지방정부는 SOC사업을 대거 반영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경우 안전이나 경제활성화 분야 등을 제외한 순수 SOC에만 859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인천시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만 8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3984억원의 증액분 가운데 1000억원가량을 SOC확충에 활용하기로 했고 경남도 또한 지역건설사업에 782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세종시, 충청도 등도 일자리 및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대거 추경에 포함시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은 대통령 공약과 더불어 국회의 논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보니 SOC를 뺄 수밖에 없었지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에서는 SOC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 "공공은 물론, 관내 기업들의 역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도 SOC가 특효약"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일자리 추경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업계는 지자체 및 교육청 추경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이 종료되는 하반기 이후 물량난을 우려했던 지역 중소기업체들은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d@



뉴스 돋보기 지자체 추경안, SOC 대거 포함

추경에 나선 11개 지자체 중 최대 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다. 도는 2조3272억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 일자리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7887억원과 778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충남도(6684억원), 경남도(4930억원), 대전시(3984억원), 강원도(3820억원) 등의 순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적게는 10% 안팎에서, 많게는 30%에 달하는 예산을 SOC 확충에 투입할 방침이다.

## 대전, 도안대로 건설 등 추경 30% 이상 투입 계획 인천, 7호선 석남연장... 충남, 지방하천 정비 추진

지역별 SOC 투자 계획을 보면, 우선 대전시가 눈에 띈다. 시는 도안대로 건설 450억원을 비롯,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300억원, 중종근린공원(3단계) 114억원 등 추경의 30% 이상을 SOC사업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나라사랑길 조성(20억원) 및 디자인센터 건립(49억원), 중부소방서 이전사업(24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미래발전 인프라 구축에 8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대 속원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98억원)을 본격화하고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115억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조성 등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인고속도 일반화 용역(32억원) 및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9억5000만원) 등도 올 하반기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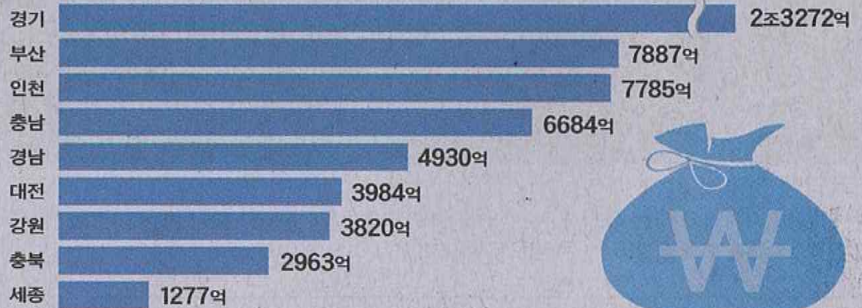
부산시도 순수 SOC 예산으로만 859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터널 접속도로(152억원)와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 개설(86억원), 천마산터널 건설(25억원) 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동시장 주차환경개선(118억원)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16억원) 등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도 역시 추경을 활용한 다양한 SOC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강권역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만 170억원 편성한 것을 비롯, 배수개선사업(128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50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45억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21억원)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도 증액 예산의 15%가 넘는 782억원을 SOC 분야에 배정했다. 그간 토상비 부족으로 지연돼왔던 동읍~봉강(155억원) 및 김해 생림~상동(55억



지자체별 추경 규모 (단위:원)



지자체별 주요 SOC 사업

**대전**  
도안대로 건설(450억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300억원)

**인천**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98억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115억원)

**부산**  
신성터널 접속도로(152억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 개설(86억원)

**충남**  
금강권역 지방하천 정비사업(170억원)  
배수개선 사업(128억원)

**경남**  
동읍~봉강(155억원), 김해 생림~상동(55억원)  
등 5개 국가지원도로 건설

**충북**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86억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41억5000만원)

원) 등 5개 국가지원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지방도 확포장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963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충북도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86억5000만원)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41억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32억8000만원), 가뭄대책(34억원) 등 시설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확충 및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 확충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제주도로 쓰레기 대책과 대중교통 혁신, 주차대책 등 5대 핵심사업에 85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종시도 12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도시계획도로 7개 사업(45억원) 및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14억원), 신흥리 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10억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봉송권기자 skbong@



“민간 건축주 공사비 甲질 막자”

# 민간공사 공사대금도 지급보증 의무화해야

민간 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건축주들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갑(甲)질’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 보증제를 민간 원도급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 분쟁, 불공정 하자 제기 후 준공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공 공사처럼 민간 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공 공사의 경우 원도급 시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 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등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 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현행 하도급 대금만 의무 적용 원도급사 지급보증은 선택사항**  
**수주시장 71% 달하는 민간부문 준공금 미지급 등 피해 잇따라**  
**건설, 의무화제도 도입 연구 착수**

은 선택사항이다. 민간 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반대 급부로 원도급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금지급보증의 의무가 아니다 보니 건설사들이 민간 건축주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용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민간 발주자의 대금체불 및 지연지급 등으로부터 건설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실효적인 대금지급 확보를 위해 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 건축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총 수주액 164조8757억원 중 민간 부문이 117조5000억원(71.3%)으로 공공(47조4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공종별로는 건축(126조6798억원)이 76.8%로, 토목(38조1959억원)을 압도한다. 결국 100조

원이 넘는 민간 건설시장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민간 공사 이행체계에서 ‘발주자-원도급자’만 대금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민간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새로운 규제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원-하도급 간 지급보증은 건설업자가 대상이지만 공사대금은 민간 사업자와 건설업자 간 지급보증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늘어나는 보증수수료 부담도 논란거리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산정할 위한 신용평가가 쉽지 않고 자칫 ‘수수료 폭탄’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민간 영역의 100조원 규모 보증을 서울보증보험 등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의 경우 예외 규정을 뒤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 것처럼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적용범위를 조정해 민간 건설시장의 충격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건축주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연 등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로 지난해 7월부터 건축물 착공 때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착공신고서에 서명하는 이른바 ‘시공자 날인제도’가 제도 도입돼 시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 도입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 유주현 건설협회장, 세계건설연합회장과 협력 증진방안 논의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조르지 마스(Jorge Mas) 세계건설협회총연합회(CICA) 회장(왼쪽)과 만나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등 건설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회장은 이날 “우리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역량도 중요하지만 산업·기업 간 융합과 통합을 통한 지속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르지 마스 CICA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럽건설산업연

합회, 중남미건설산업협회 등 회원 지역연합회와 세계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손잡고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 회장 역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 건설업의 세계적 지위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광종합건설, 강원저축은행 인수 최종 승인

청광종합건설(대표 허승)이 강원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청광종합건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광종합건설의 강원저축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저축은행 인수 심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사전심사를 한 뒤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앞서 청광종합건설은 지난 3월

이사회를 열어 강원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안건을 결의했다. 청광종합건설의 자회사인 ㈜청광이 1대 주주로 지분 42.69%를, 청광종합건설은 2대 주주로 42.31%를 인수하기로 했다.

청광종합건설 관계자는 “강원저축은행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금융 전문 경영인에게 책임 경영을 맡길 방침”이라고 전했다.